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년 10월 22일  
행정·재무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10월 8일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10월 22일

라. 상정일자: 제26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19. 10. 22.)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교육청소년과장 정영숙)

### ☐ 제안이유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 확산과 아동권리 증진에 기여하고 강서구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를 연장하여 아동참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함.

## □ 주요 개정내용

가.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 조항 신설(안 제9조)

나. 아동참여위원 임기 변경(안 제20조제2항)

○ 1년 임기, 1회 연임 → 2년 임기, 1회 연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19. 8. 21. ~ 9.10.)결과: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배금택)

가. 개정 취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강서구청장이 제안하여 2016. 9. 28. 제정된 조례로 이번 개정안은 그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안 제9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 조항 신설

- 아동의 권리 증진과 아동권리 인식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 실시

- [안 제20조제2항]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 1년 임기, 1회 연임 → 2년 임기, 1회 연임

## 다. 종합 의견

-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실시 조항 신설(안 제9조)
  -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조항 신설은 아동과 아동의 보호자 뿐만 아니라 아동 관계자와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일반인에게 아동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배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중 하나인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를 조례상 명문화한 것으로 본 조항 신설을 통하여 체계적인 아동권리 홍보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대 원칙
1. <u>아동의 참여 보장</u> :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 청취 및 고려
2.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구축: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 마련
3. 아동권리 전략 개발: UN 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의 개발
4. 아동권리 전담기구 마련: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 마련
5. 아동영향 평가: 실시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 마련
6. 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
7.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 수집
8. <u>아동권리 홍보</u> :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홍보
9. 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 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 개발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마련: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 개발 및 시행

○ 아동참여위원의 임기 변경(안 제20조제2항)

- 1년 임기, 1회 연임인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를 2년 임기, 1회 연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아동참여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임기 조정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의견 제시 및 정책 제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제2조제5호 인용조문 수정 및 부칙 적용례 신설 필요성

-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 안 제9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를 신설하면서 개정 전 제9조 이하 조를 차례로 뒤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제2조제5호에서 인용한 제30조(아동권리지킴이)가 개정 후 제31조로 변경되었으나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위원의 임기를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도 적용하여 임기의 기산일을 위촉된 날로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입법 의도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신 조례를 적용할 때 어느 단계부터 적용할지를 정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부칙에 적용례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sup>1)</sup>.

1)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293~294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 8. 수정안의 요지

### 가. 수정이유

- 제2조제5호 중 인용조문 수정
  - 안 제9조 신설에 따라 제2조제5호 중 인용된 개정 전 제30조를 개정 후 제31조로 수정
- 부칙 경과조치 신설
  -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1년 임기 적용

### 나. 수정내용

제2조제5호 중 “제30조”를 “제31조”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 붙임 수정안 조문 대비표 및 관계 법령 각 1부.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개정안과 같음)
5.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으로 위촉된 제30조의 아동권리지킴이가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5. ----- ----- 제31조----- ----- -----.
6.·7. (생략)	6.·7. (개정안과 같음)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 □ 아동복지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청소년 기본법

-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